

전남도, 어르신 의료·요양·복지 통합돌봄 '잔걸음'

시스템 구축·지역특화 서비스 발굴 전담조직 설치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026년 '전남형' 모델 전 시군 도입 '대상자별 여건 맞게 체계적 서비스'

전남도가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어르신이 사는 곳에서 의료·요양·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는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선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여수시를 포함한 전국 12개 시군

구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다. 2026년도부터는 전국적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어르신 통합돌봄 체계의 전 시군 도입·운영을 위해 23일 여수시 시범사업 추진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기본서비스에 더하는 특화된 돌봄서비스 발굴 △서비스 대상자 심사·선정 체계 운영 △통합돌봄 종사자 육성 등 종합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2일에도 여수시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순천, 담양, 영광 3개 시군의 통합돌봄 추진 상황과 광역화 방안을 협의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전남형 어르신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정부의 통합돌봄 대상자 정보공유 시스템과 연계한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도와 시군별 통합돌봄지원센터 전담조직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2026년부터는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를 융합한 전남형 어르신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전 시군에 도입 운영할 예정이다. 전남형 모델은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등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방문간호 △물리치료사 방문지도 △만성질환 건강지원 △신체·가사활동 및 이동·목욕 지원 △주야간 보호 △식사 지원 등을 기본 서비스로 제공한다. 또한 전남도 명품 복지사업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24시간 위기 지원콜

(120), 전남형 치매돌봄체, 은둔형 외톨이 및 고독사 예방사업 등을 특화형 서비스로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그동안 돌봄서비스 대상자는 같아도 서비스 제공 영역이 서로 달라 시군,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등의 사업 정보 공유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통합돌봄시스템을 활용해 의료·요양·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대상자별 여건에 맞게 더 체계적이고 더 촘촘하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전남도, 전국소년체전 등 응원단 1만7000명 운영

전남도가 오는 5월 개최하는 제53회 전국소년체전과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 선수단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만7000여명 규모의 응원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9000여명의 실·국, 22개 시·군 자매결연 응원단과 초·중·고 학생들로 구성된 7300여명의 학생응원단, 주 개최지인 목포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700여명의 시민 응원단 등이 현장 열기를 고조시킨다는 계획이다. 응원단은 경기장별 자매결연 도시 선수단의 경기관람과 열띤 응원을 펼치고, 선수단 숙소 위문 활동으로 따뜻한 남도의 정을 나누게 된다. 경기장 입·퇴장 질서유지와 경기 관람 후 주변 정리에 도 솔선할 예정이다. **곽지혜 기자**

도는 응원단이 경기장을 방문해 응원수건, 종이 짝짝이 등 응원도구를 활용, 열띤 응원을 펼치도록 응원 용품을 제작해 배부기로 했다. 김용수 도 체전지원단장은 "그동안 땀 흘리며 열심히 연습한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하도록 응원단 구성 등 대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회기간 선수단이 불편함이 없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제53회 전국소년체전대회는 5월25~28일 22개 시·군에서 36종목이,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5월14~17일 17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대회 기간 2만2000여 선수단과 임원 등이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곽지혜 기자**



동구 그린데이 임택 광주 동구청장, 동구 관내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 등이 23일 동구 행정원에서 우리 함께 나란히 그린데이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김영배 기자**

전남도, 시설작물 일조량 피해 재해보험 개선 건의

전남도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작물 재배 농업인이 일조량 감소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에 피해를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현행 보험약관에 시설원에 작물 일조량 감소 피해는 기타 재해로, 피해율이 70% 이상이고 전체 작물 재배를 포기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70% 미만 일조량 감소 피해를 입은 대다수 농가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벼는 재해로 분류돼 피해를 10%를 초과, 재이양(재작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어 대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태풍이나 호우 등은 기상특보를 근거로 재해로 인정되지만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일조량 감소는 어느 정도 감소 시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 관련 기준이 없어 농업인 피해 신고와 조사 시기

결정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도는 시설재배 작물 보험금 지급기준을 피해율 '7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하고, 일조량 감소가 평년보다 25% 이상일 경우 재해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정광현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일조량 감소 피해가 14년 만에 재해로 인정받긴 했으나 기후변화로 이같은 상황은 일상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겨울(12~2월) 일조량이 25% 이상 감소해 멜론과 딸기 등 작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전국 최초로 건의해 재해 인정을 받아, 현재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다. **곽지혜 기자**

광주시,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검사 '안전'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20곳 조사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지역 식품용수로 사용된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곳 모두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사전에 파악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대상은 식품 제조가공업소 8곳, 집단급식소(사회복지시설 포함) 3곳, 일반음식점 9곳 등 모두 20곳으로,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조

사대상 시설을 직접 찾아 사용 중인 지하수를 채수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될 때는 해당 시설의 지하수 관정·물탱크 등을 봉인하고, 소독·청소, 오염원 점검 등 개선 조치를 한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재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노로바이러스는 봄·겨울 집단식중독의 주요 원인이 되는 병원체이다. 오염된 지하수로 씻은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거나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굴·조개 등 해산물을 섭취할 때 감염될 수 있고, 감염자와 직·간접 접촉 등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감염 증상은 바이러스에 노출 후 평균

1~2일 잠복기를 지나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건강한 성인은 보통 2~3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는 심한 탈수 증상과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특히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만큼 지하수 사용 시설에서는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 섭취하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선제적 검사를 통해 식중독 예방 등 시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희 기자**

광주시, 내달 7일까지 '개식용 업종' 운영신고

광주시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축·유통·판매하는 지역업소를 대상으로 5월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받는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월6일 개식용종식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식용개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품점객업 신규 개설이 금지됐고, 오는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할 수 없으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운영신고서를 영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업체들은 오는 8월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전업, 폐업 일정이 담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등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며, 영업장 폐쇄조치와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콜센터(1577-0954)를 운영해 개사육농장의 영업신고와 이행계획서 작성방법, 민원 분야 담당 부서를 안내하고 있다. **노병희 기자**

전남도, 귀농귀촌 박람회서 우수 지자체상

맞춤형 지원 등 호평

전남도가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Y-FARM)에서 우수 지자체상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은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는 지난 21일까지 사흘 간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전시장에서 농협중앙회 주최로 개최됐다. 귀농귀촌 정보 제공과 미래 농업기술 공유를 위한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73개 지방자치단체와 농업 관련 30개 기관·기업이 참가해 최근 청년 농업인에게 각광

받는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 미래 새로운 농업기술을 선보였다. 전남도는 박람회 개막식에서 그동안 추진한 정책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인정받아 우수 지자체상을 수상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전남도는 17개 시·군과 함께 전남도관 통합부스를 운영, 1대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전남에서 살아보기 △어울림마을 조성 △우수 창업 활성화 등 전남만의 차별화된 귀농어귀촌 지원정책을 홍보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전남만의 우수한 정책과 빼어난 자연 경관 등을 소개하는 전남도 귀농귀촌 설명회를 개최하고, 320여명이 전남도관

부스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는 등 인기를 얻었다. 또 현장에선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홍보와 가입이벤트도 진행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3차례의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1920명의 도시민들에게 맞춤형 귀농귀촌 홍보와 상담을 제공했다. 김명신 도인구청년인민국장은 "전남의 우수한 정책들이 정부지원사업에 반영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비 귀농어귀촌인에게 전남도의 매력을 알리고, 전남만의 특색 있는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